

# 고흥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10대 과제 종합대책'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12일부터 22일까지 112개 사업장 및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주거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잠정 중단하고, 국내 정착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 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근로자 입국 1개월 이내에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마쳐야 하며,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4개 조 8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꾸려 반기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농업 거점별로 공공형 기숙사를 확충해 표준화된 숙소를 제공하고,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4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전담 조직 8명으로 확충·거점별 기숙사 건립 등

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을 높인다. 불투명한 도급제 대신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행정 지원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4명인 전담팀 인원을 팀장 포함 총 8명(일반직 4명, 계약직 4명) 체제로 개편해 현장 밀착형 관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군은 2026년 고용주 408명, 근로자 1413명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는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고,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 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흥군 내 굴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외노자 공급 브로커의 개입과 임금 착취, 가혹 행위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고흥/박도일 기자

## 광주소방, "119안심콜로 가족 안전 지키세요"

건강정보 사전 등록해 응급상황·병원이송 신속 대응 지원  
4월10일까지 가입 이벤트...추첨 통해 '구조권 인정' 증명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119안심콜'은 고령자·장애인·병력질환자 등 위급상황에 취약한 시민이 가짜전화, 복용 약물, 주 진료병원 등 자신의 건강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 신고 접수와 동시에 구급대원이 이를 확인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이 문자로 전달돼 빠르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대상자를 대신 등록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119안심콜에 가입한 뒤 가입완료 화면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에는 #광주 소방, #119안심콜가입인증, #광주전남행정통합 등 해시태그를 포함해야 한다.

이벤트 기간 인증을 완료한 시민 중 10명을 추첨해 119구조권 '일구'



인증을 증명할 예정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벤트 기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방법과 활용 사례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119안심콜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에 가입해 가족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 광주시, 봄철 치매어르신 안전망 구축

인식표·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등 실종 조기발견 체계 강화

진단검사·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 맞춤 서비스

광주광역시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 이 기기는 신발·가방·우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

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기억력검사)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가져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누명 쓴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수사 속도내나

16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경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백모씨 부녀(父·女)의 억울한 옥살이가 드러나면서 사건 실제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전남청 형사기동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초기 수사를 진행한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긴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측에서도 관련 증거와 수사 기록 등을 넘겨 받아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수사가 '부녀의 공모'라는 전제 아래 이뤄졌던 것과 달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백씨 부녀와 변호인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

## '재심서 무죄' 경찰, 전담팀 투입... 기록 재분석 강압 수사·증거 논란 재부상... 책임 공방 확산

으로 불러 수사 기록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청산가리와 막걸리의 유인 경로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일부 보란 중인 증거물에 대해 재검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한계가 있었던 과학수사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 분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6년이 흐른 데다, 과거 수사 기록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며 발생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백씨 부녀가 갈등 관계였던 아내이자 친모인 최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은 엇갈렸다. 1심은 자백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 구입 경위가 불분명했고, 청산가리 입수 시기와 범의학 감정 결과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핵심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부녀의 진술 태도와 달리 검찰 조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두고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재심을 맡은 광고법원은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강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백씨 부녀의 무죄 판결 여파는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여수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무죄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당시 수사 책임자(순천지정 차장검사)였던 김희재 전 국회의원에게 "조작과 인권침해로 한 가정을 파괴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회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뉴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수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